

농촌지도직 국가직으로 환원해야

김 성 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Reestablishing the National Status of Agricultural Extension Educators

Sung Soo Kim

College of Agriculture &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지금 우리 농촌은 1997년 농촌지도직이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된 뒤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정보교류는 단절되고, 농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대접받고 있습니다. 신개배기술·신품종은 물론 병해충이 발생해도 문의하고 상담할 기구가 구조조정으로 축소되고 전문 지도요원은 퇴출돼 농업기술센터는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전문 지도요원의 충원이 없이 일반행정요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농사기술에 대한 상담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마는 행정태이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시킨 97년 이후 나타난 현상은 한 농민이 보내온 위의 편지글에 웅변적으로 나타나 있다.

잘못된 지방직 전환의 결과로 농민 불만을 고조시키는 물론, 식량 자급, 친환경농업 등 국가적 필수 기능이 저하되고, 중앙·지방간 기술정보의 교환, 인사교류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지도인력의 과다 감축 및 지도사업 정체성 악화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인 현재에도 우리 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32% 미만이며, 전세계적으로 8억 명이 가난과 영양 실조로 신음하고 있다. 기아와 영양 부족으로부터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를 달성하는 일은 세

계적인 최우선 과제이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량 생산은 농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농민들이 ‘먹을 것’을 생산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없으면 ‘초고속통신망’도 환상일 수밖에 없다. 국민도, 국가도 식량 농업이 없이는 지탱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농촌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격려와 제도적 뒷받침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주택·교통·공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농업·농촌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잘못된 ‘변화와 개혁’, ‘구조조정’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40여년 전 우리의 소원이었던 ‘쌀밥에 고깃국’이 농민들의 땀과 농민·농촌진흥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루어졌음을 바로 평가하고 현재 통일의 동반자가 될 북한 국민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가적 기본 기능으로 농촌지도를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고객인 농민들의 전문기술 지도수요에 맞는 지도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직으로 환원하여,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생산, 국토의 균형발전, 환경보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국가적 과제일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입법부와 행정부는 지방직 전환을 조속히 철회, 국가 기본 기능으로 회복시키고 농촌진흥 인력을 과감히 증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 구축을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